

충남도청 터 활용방안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자!

이용원 | 월간 토마토 편집실장

오는 11월 충남도청이 움직인다. 충남도청 이전은 대전광역시에 일어날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다. 충남지방경찰청까지 포함하면, 한 공간에 머물던 2천여 명이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니 보통 일은 아니다.

중구 대흥동에 있던 대전시청이 중구 둔산동으로 떠나면서 대흥동, 선화동 등 원도심 쇠락이 본격화됐다. 원인을 공공기관 이전에만 들리는 것은 너무 좁게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충남도청과 경찰청이 그 일대 선화동, 대흥동 지역 상권에 미쳤던 영향을 고려하면 도청 이전이 가져올 심리적 여파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대전시가 충남도청 이전 후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권 위축으로 좋지 않은 민심이 행정기관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발연 계획, 동의하기 어렵다!

처음 충남도청 이전 후 남은 터와 건축물 활용방안을 모색할 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조심스럽긴 했지만 ‘국립박물관’ 유치를 추진했고, 마침 선거 국면 등의 상황에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사실상 무산 되었다. 이후 대전시는 바꿨다. 도청활용 방안이 지방선거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각계 영역에서 이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대전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것이 “(가칭)한밭복합문화예술단지 조성 사업”

이다. 이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박물관 창작지구와 문화예술비즈니스지구 개발이 사업 핵심이다. 충남 도청과 도의회 자리에 들어서는 박물관 창작지구에는 연합교양대학, 아트레지던스와 아트팩토리, 1인 창조기업 등이 입주하는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정원과 상설공연장도 만든다는 계획



〈현, 충남도청 부지 모습〉

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자리에는 문화예술 비즈니스 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국제예술대학과 K-POP 아카데미, 문화예술 컨벤션센터, 멀티플렉스몰 조성을 추진한다.

근데, 이 발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역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전 중구청은 중구청사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근 상인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련 시설보다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계획이 별 설득력을 못 얻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나마 이런 다양한 논의와 주장도 요즘엔 접하기 어렵다.

두 가지 이유로 보인다. 하나는 계획 자체가 전폭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계획의 논리적 당위성이 무척 취약하다. 넓은 공간에 늘어놓고 싶은 것은 모두 늘어놓은 듯하다. 개별적으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한군데 모아 놓은 인상도 짙다. 이 과정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핵심 고려 대상으로 두었다. 도청이전으로 상권이 약화될 것이란 점에만 몰두한 결과다. 목적이 약하니 계획도 약하다. 어중에 특히 문화예술 비즈니스 지구는 더 당황스럽다. 무엇을 하려는 건지 머릿속에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그 공간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채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소유권 이전 문제다. 이를 대전시가 충청남도로부터 매입할 것인지, 무상 양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인수해 국책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대전시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난 7월 국무총리와 전국 6대 광역시장과의 오찬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의 "충남도청 이전이 임박함에 따라 도청 이전 부지의 활용 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대전시로 무상 양여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직 어떤 가닥으로 풀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획수립 전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복권 당첨 후에 당첨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는 것처럼 맥이 풀리는 것이다. 맥이 풀리니 도청 활용 방안이 슬그머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 터와 건축물 등의 소유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많은 한계가 있다. 이 문제가 활용방안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도 분명하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인수해 국책기관을 들이겠다고 결정하면 지역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모두 공염불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지역과 지역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우선이라는 점만은 변화가 없다. 이 점은 국가에서 터와 건축물을 인수해 활용방안을 모색해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에 관한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밀하고도 꼼꼼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후 도청 터 활용방안 논의 주도권을 지역에서 잡기 위해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문화’ 라는 주제어, 맞다!

도청 활용 방안을 두고 초점이 잘 모이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시각차가 너무 컸다는 점이다. 굵직하게 이 시각을 정리하면 두 가지 정도로 보인다. 도청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시각과 대전광역시 전체 섹터에서 도청 터가 갖는 공간의 의미와 가치에 방점을 찍는 시각이다. 그리고 한발복합문화예술단지 조성계획에 절대로 지지의사를 밝힐 수 없는 건 전자의 시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가 벌인 수많은 정책 중 근시안적으로 바라봐 실패한 것이 어디 한둘이던가? 도청 터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우루루 빠져나가 장사가 안 될 것이고 이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은 거세질 것이며 당장 눈에 보이는 현지 모습이 ‘할렘’으로 변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할 방안만 모색하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연합교양대학이나 국제디자인대학 등이 결국 소비를 촉진할 젊은층 유입에 초점을 둔 활



용 방안 아니던가? 그 실현가능성을 떠나 가치와 의미 측면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두 시각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으니, 도청 이전 터 활용 방안에서 ‘문화’를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후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성장 제일주의 정책에서 문화 영역은 늘 후순위였지만 최근 이 영역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에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다. 여기에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서울 대학로나 홍대 등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 덕에 모이기 시작한 동네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직접 확인한 후로는 ‘문화’가 도시를 재생하는데 무척 유용한 도구라는 걸 알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터 활용방안을 논의하며 핵심 주제가 ‘문화’인 것에 대한 반발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일 게다.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다른 주장을 펼치는 그룹도 적잖다. 그러나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는 사실은 언론사와 대전발전연구원 설문조사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가 쇠락한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며 벌이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정책을 볼 때 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개발’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익숙한 우리가 낯선 ‘문화’ 영역, 특히 그중에서도 예술을 바탕으로 둔 문화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를 도구로 활용할 때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치밀하고 고도화된 계획이 필요하다. 문화 영역 자체가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엔 한계가 명확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도로를 건설하면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도 차가 뿔뿔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문화영역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자칫 막대한 예산만 쏟아 붓고도 걸 맞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화’라서 그렇다. 조금 감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문화는 ‘공간’과 ‘시간’에 사람이 들어가 만들어 내는 산물이다. 이것이 어떻게 단기간 계획을 통해 형성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겠는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것과는 달리 살아 있는 생명체를 양육하듯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는 분명 유기체다.

생태계, 약한 고리를 찾아라!

‘유기체’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도청 터와 건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이 나온다. 이 공간을 단순한 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유기체란 많은 부분이 일정



한 목적 아래 통일·조직되어 각 부분과 필연적 관계를 갖는 조직체다.

하나의 판 위에 올려놓은 구성 요소와 그 요소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이미 도청 터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이전부터 대흥동과 은행동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과거 연정국악원 건물도 신축해 예술인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도청 이전에 부수적 산물이기도 한 대흥동 관사촌 근현대 건축물 활용에 관한 이야기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참고로 대흥동 레미도서관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런 도청 터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공간과 각 공간별로 벌어지는 정책 사이에서 논리적인 '필연적 관계'를 발견하기란 현재로서는 어렵다. 도청 터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이런 '관계' 속에서 고민하기보다는 '도청 터'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해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근시안적 고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것을 고려해 도청 터 활용 방안을 제대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전의 문화적 수준'을 분석해내는 것이 먼저다.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어야 할 이 영역이 없다. 그냥 대략적인 '감'으로 넘어간다. 대전을 '문화적 불모지'라고 쉽게 표현하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중구 대흥동 일대를 '대중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구호 외치듯 발표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관해선 제시하지 않고 누구 하나 심각하게 묻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발복합문화예술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마찬가지로 설득력은 없다. 현실이 이렇다.

'문화'를 도청 터 활용방안의 도구로 활용할 때 사람이 많이 모여 주변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기대 효과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부수적인 효과를 너무 강하게 인식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 대전이 처한 문화적 수준을 명확하게 분석해 내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그려 보면서 '과잉과 결핍'을 이해해야 한다. 과잉은 억누르고 결핍은 북돋아 생태계가 안정적이면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청 공간에 어떤 기능을 부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결국, 두 번째 시간을 견지한 상황에서 도청 터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도청 안에서 활용방안을 길게 고민해 보자!

이 글에서 도청 터에 어떤 기관을 넣고 어떤 기능을 부여하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이 아무리 획기적이고 기가 막힌 내용이라도 지금껏 나온 수많은 의견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어떤 시설(기관)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프로세스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100년 후를 내다본 긴 안목의 계획이 나와야 한다. 기관에서 핵심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은 이 논의와 의견수렴 방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이것이 도청 터 활용을 앞에 둔 시점에서 밟아야 할 첫 번째 스텝이다. 도청이 이전한 후에 도청 터를 비롯한 건물에 재빨리 무엇을 집어넣기 전에 '100년 앞을 내다 본 도청 터 활용 방안 모색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시켰으면 좋겠다. 이들이 이 공간에서 다양한 시도를 벌여 보는 게다. 방송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정 프로그램으로 확정하기 전에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처럼 전시도 기획해 보고 단기 레지던스도 해 보고 공연도 해 보고, 창작 센터도 운영해 보고,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과 아카이빙 자료실도 만들어 보고, 그 과정에서 도청 터를 찾는 시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어차피 그 터가 없어질 것도 아닌데, 조급하게 마무리짓지 않았으면 좋겠다.